

## 제5차 동북아경제포럼 참관기

김규훈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동북아경제포럼은 1991년 중국 장춘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북한의 평양,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한국의 용평에서 4차례에 걸쳐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몽골 및 북한 등의 학자 및 재계와 관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여왔다. 또한 동북아지역에서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다자간 경제협력 프로젝트인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IDP)과 관련하여 유엔개발계획(UNDP) 및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관계자들도 참석한 바 있다.

제5차 동북아경제포럼이 개최된 니가타(新潟)는 북한의 만경봉호가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항구로서 과거 재일동포를 북송시킨 곳이기도 하다. 니가타는 일본의 서해안에 위치한 관계로 도쿄나 오사카와 달리 공업화가 덜 진전되어 있으며,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발전된 지역이다. 따라서 니가타의 일본사람들은 동해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이 니가타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니가타가 두만강 개발 및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제5차 동북아경제포럼은 니가타현 니가타시 환일본해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 ERINA), 니가타 현 상공 회의소, 니가타경제동우회 및 미국 하와이대학의 동서연구센터(East-West Center)와 동북아경제포럼(Northeast Asia Economic Forum)에서 주최하였으며, 일본의 유엔창설 50주년 기념사업회와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후원하였다.

제5차 동북아경제포럼은 “동북아 지역개발과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전망”이라는 주제하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몽골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산학협동재단의 남덕우 이사장이, 일본에서는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및 아·태협력 담당 특명전권대사인 엔도 테쓰야 대사가 기조연설을 하였다.

각국의 참석자는 한국이 40여명, 중국이 11명, 미국이 11명, 몽골이 6명, 러시아가 3명 참가하였는데 북한은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한국측의 참가자가 많은 이유는 북한측이 참가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측이 참가하지 않음으로 해서 세미나의 열기가 반감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필자도 북한측이 이와 같은 국제회의에 자주 참석해서 견문을 넓히고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유지도 해야 경제난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참석하지 않은 게 아쉽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한편 급변 회의에는 UNDP와 UNIDO 및 ADB의 관계자 및 유럽개발은행(EBRD)의 러시아 담당관이 참석하여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반영하였다.

동북아경제포럼에 한국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하와이대학의 조이제 박사의 활발한 활동때문이다. 조이제 박사는 미국과 일본에서 수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하와이대학의 동서연구센터의 부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비전을 일찍부터 제시한 분 중의 하나이다.

급변 회의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초연설에서 엔도대사가 아·태경제협력에 대한 일본측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남덕우 이사장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한국측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전망, 두만강지역개발계획, 동북아 개발 관련 금융지원문제 및 기업간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제5차 동북아경제포럼의 회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지역에 동북아개발은행(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

NEADB)의 설립에 관하여 참석자들이 필요성과 실질적 추진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토의 결과 참석자들은 NEADB의 설립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북한이 IMF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ADB 등 기존 국제금융기관과의 조율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둘째 참석자들은 북한과 러시아를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APEC은 신규회원국의 참여문제에 대하여 1993년 회의에서 1997년까지 유보하기로 한 바 있다.

셋째 동북아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한국 및 중국의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회의가 니가타지방에서 개최된 때문인지, 중앙정부의 역할보다는 동해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의 추진은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 기업들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넷째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의 발전과 관련하여 UNDP 관계자는 한국, 중국, 북한, 러시아에서 4차례에 걸친 계획관리위원회(PMC)를 개최하여 두만강유역개발회사의 설립 및 접경국가들의 토지 임대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나, 최종 보고서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 UNDP 관계자는 두만강지역개발에 관한 포괄적 보고서가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약 한달 후에 완

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초기에서부터 동 계획에 대하여 참가국 고위관계자의 추인을 얻기로 하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차 동북아경제포럼에서는 1991년부터 개최된 일련의 회의 결과를 종합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들은 두만강지역의 개발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과 발전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한편 동북아경제포럼이 관장하는 조정기구와 사무국의 설치할 제의하며, 이 조정기구는 우선 그 동안 개최된 회의에서 발제된 안건 및 연구사업의 수행을 조정하는데 노력한다. 또한 이 조정기구는 비정부적 기구로서 존재하며 개발대안과 정부적 차원의 관심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동북아경제포럼은 지방차원의 상업, 무역, 사회간접자본 지원을 위한 개발 금융문제에 대하여 계속 연구한다.

동북아 경제협력 문제를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연구하고 있는 필자는 금번 회의에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민족분단의 슬픔을 느꼈다. 많은 학자, 정부관계자 및 재계인사들이 주지하듯이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번 회의에 대한 북한측의 불참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좌절감을 안겨주지 않았나 한다. 여기에서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한국의 입장에서 간략히 피력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경제협력의 구도와 관련하여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의 경제협력 추진을 상정할 수 있는데, 한반도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남한이 미국 및 일본을 주 무역대상으로 한 결과, 남한의 서해안지역에 대한 개발이 동해안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것이다.

둘째 동북아 경제협력의 추진은 남한의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인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과의 경제협력과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중이나 개발도상국인 중국과의 사이에서 남한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 경제협력이 남한에 대하여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에 대비한다는 차원이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북아 경제협력을 주도하는 능동적 입장에서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북아 경제협력이 북한의 개방·개혁을 촉진하여 북한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